



일본 정부, 부유층 증세를 통한 저소득층 지원

이상우 선임연구원

- 일본 수상의 자문기관인 정부세제조사회는 소비세(부가가치세)를 인상하는 대신 고소득층에게 소득세율과 상속세율을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임.
 - 일본 정부와 여당은 현행 5%의 소비세율을 2015년까지 10%까지 인상할 방침이며 우선 2013년 7~8%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.
 - 그러나 일률적인 소비세 인상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소득층의 소득세와 상속세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.
- 일본의 소득세는 1970년대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19단계로 나뉘어 있었으나 경기침체 장기화와 정치권의 선심 정책 등으로 현재 6단계로 줄었으며 75%에 달하던 최고세율도 40%로 낮아졌음.
 - 연간 과세소득이 1,800만 엔 이상인 소득자에게 최고세율인 40%가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연간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최고 세율이 동일하다는 비판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음.
 - 이에 따라 세제조사회는 소비세 인상안과 함께 소득세를 인상하기 위해 고소득자의 소득구간을 세분화하고, 수입이 많을수록 세율을 높이는 세제개혁안을 연말까지 내놓을 계획이며, 소득세 인상은 이르면 2013년 1월부터 적용할 방침임.
 - 이와 함께 세제조사회는 소득세 증세를 통한 세원 확보를 통해 생활보호가구에게 주요 생필품 구입 시 부담한 소비세 증세분을 환급해주는 저소득층 대책을 마련함.
- 한편, 11월 24일 일본 국회는 지진복구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임시증세와 부흥채권 발행을 포함한 「부흥증세 법」(안)을 중의원회의에서 가결하였음.
 - 이에 따라 소득세에서는 2013년 1월부터 25년간 약 7.5조 엔, 주민세에서는 2014년 6월부터 10년간 약 2천억 엔 규모의 재원이 확보될 전망이다.

(아사히신문 11/ 21, 마이니치신문, 산케이신문 11/22, 니혼케이자이신문 11/24 뉴스 종합)